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6
제62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82회 임시회 개최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4/07

주요 이슈



10/11

함께 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아름다움 속 역사의 생채기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대정읍 송악산 일대엔 역사의 생채기가 오롯이 남아있다. 해안절벽지대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15개의 진지동굴이 있고, 드넓은 벌판 '알뜨르'에는 항공기 격납고 23기가 산재해 있다. 제주4·3 유적지 첫알오름과 평화의 조형물 '파랑새'가 아픔을 아우르며 서 있다. / 미디어팀 김명선

“제주의 경제 살리기 예산 편성 이뤄져야”

제382회 임시회 열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 382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주도의회는 5월 14일 제 382회 임시회를 열고 21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민들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 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며, “1분기 제주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액 감소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면 지역 경제에 인공 호흡기를 달아줄 제주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2020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 을 통해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수

용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며, “제주도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도 이날 “오는 20일 진정한 봄과 함께 그리웠던 아이들이 학교에 온다. 아이들의 등굣길을 안전과 건강의 꽃길로 만들겠다.” 며, “등교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 19 대응에 노고와 헌신을 다해주고 계시는 방역과 의료 당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6조 538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 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 지원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분 266억 원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 468억 원을 지출하는 내용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불용 예산을 활용해 도내 초·중·고 학생 1인에



계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폐회사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5월 21일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세출예산 효율화(절감)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제주도정이 “명확한 방향제시와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제주도정 재정위기 도민에 떠넘겨” 제382회 임시회 폐회, 추경안 등 의결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실례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희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지역의 단체와 지역의 소규모 업체로 바로 예산이 투입되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현재 도가 진행중인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관련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의 중지’, ‘위탁·대행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후 과다사업비 조정’은 사실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재정위기를 말하며 예산 편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미숙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진정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존 275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재정 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

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공약사업들이 계획된 지 2년이 지났으며,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발한 지금의 현실을 고려해 공약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개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제안하며 원 지사의 용단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 중에는 중산간구역과 고산·무릉지역 신규 지정 등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과 시민참여형으로 마련된 ‘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에 서귀포항내 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제1회 추경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

“도민생활 안정,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할 것”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2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예산의 취지를 살려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속하

고,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여파는 도내 14번 째 확진자 발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차, 3차 감염을 유발하면서 제주 역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등교 개학은 방역 최전선의 확대에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의 일상화를 전제로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자신과 가족,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비심리와 여행심리 위축으로 제주의 관광·서비스업과 1차 산업이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

고 있으며, 경제주체 심리동향인 BSI는 200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고용률은 전국 1위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2.3% 하락한 것으로 제주도정은 지금의 위기에 적극 대응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코로나19는 도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으며, 확고한 방역체계의 확립과 함께 제주경제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희망지원금 조속히 지원한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5월 21일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따른 인사말을 통해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해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1인당 30만원씩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교육감은 이어 지난 20일 시작된 고3 등교수업과 관련해, “등교수업을 실현해주신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의회와 도청,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시작된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 물품 확충 및 보급에도 지원을 집중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전망을 세밀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며,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모아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도민에 지급방안 강구...교육희망지원금 학교밖 청소년에도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편성한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의원·사진)는 5월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1

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증·감액 없이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원금과 달리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본 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긴급 편성됐다. 재원은 국비(1575억)와 지방비(734억)도 마련됐다. 지방비는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됐다.

제주도는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

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외에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468억원이다.

이에 대한 예결위의 주문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2차 지원금 예산 468억원에 1차 지원금 지급액 잔액을 포함해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예결위는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현금과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25억330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는 교육위원회 증·삭감 규모(25억1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

가한 것이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 등 항목에서 25억3300만원을 감액, 교사 노트북 지원 5억원과 스튜디오형 교실 장비 지원 10억원을 합쳐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비용 15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7억원이 증액됐다. 비인가 대안학교 방역물품 지원 5000만원과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보전 1억6800만원은 신규 편성됐다. 예결위는 또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제한 항목 중 ‘학원’을 삭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안은 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강성민 의원



△김경미 의원



△김장영 의원



△문경운 의원

“의회 동의없이 보조금 일괄 삭감 위법” ‘지출 구조조정’ 의회 경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효율화(세출절감)를 통해 민간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및 의회 경시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보조와 행정 내부 경상경비 사업 등을 일괄 삭감(10%)해 470억원 가량을 마련했다. 현재 추가로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도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30% 지출구조조정 원칙하에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검토해 낭

비요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5월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민간보조금 감액은 결국 의회가 결정해 확정된 예산에 대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가 의결한 것을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은 의회 권한 침해고 불법적인 행동이다. 원상복구해야한다고 본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호형 의원



△송창권 의원



△양영식 의원



△이상봉 의원

“교육청, 교육재정 악화 준비 소홀” 법정 수입 감소 등 예상, 대책 절실

제주도교육청이 향후 교육재정 악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5월 20일 열린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교육재정 가운데 법정 이전 수입 등은 향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는 추가 세입을 발굴하지 못하면 세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주도가 세출을 조정할 때 교육청에 전출하는 비용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제주도교육청도 제주

도처럼 사무관리비 등을 투입해 재정지단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도내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원들은 “제주도내 학교 가운데 학생수가 200명 이하인 76개 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읍면 지역 학교로, 이들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



△한영진 의원



△현길호 의원



△홍명한 의원

특별위원회

“아픔 치료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돼”

4·3트라우마센터 개소식 참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와 4·3특별위원회(정민구 위원장)는 5월 6일 4·3트라우마

마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4·3트라우마센터는 제주4·3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거 국비(50%), 매칭사업 도비(50%)를 부담해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제72주년 4·3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4·3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고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승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한바 있다.”고 말하면서, “도의회에서 4·3트라우마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은 “이번 4·3트라우마센터 개소로 인해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국가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아픔을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을 비롯한 김희현 부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태순 위원장,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고현수 의원, 김장영 의원, 김황국 의원, 문종태 의원, 이승아 의원, 조훈배 의원, 현길호 의원, 홍명환 의원이 참석하였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5월 14일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송승문 4·3유족회장, 김춘보 4·3유족회 상임부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순문 제주도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허영선 4·3연구소장,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도민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여당과 야당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5월 12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지난 4.15총선 때 여당과 야당 모두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4·3특별위원회에서 제주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도민 및 4·3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지원할 범도민위원



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2차 비공개 토론회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2차 비공개 토론회가 5월 7일 김포공항내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렸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전 참석 패널 간 상호이해와 문제의식 공유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연속토론회의 세부 의제 및 자료 준비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위해 토론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1차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공항 인프라 필요성(항공수요 환경수용력 환경

주민수용성 등)에 대해 논의 되었고 2차에서는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등)을 의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제1차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주요 쟁점 사항은 공항 인프라 필요성 관련 세부의제에 대해 1, 2세션으로 나눠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회자는 갈등관리 전문가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반대측 토론자는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민 대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참여했고 강원보 성산을 신산리 이장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 연구센터 교수가 배석했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오원만 신공항기획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환 박사 제주연구원 강진영 박사가 참여했다. 배석자로는 선진ENG 이진우 부장, 아주대 최정윤 박사, 한국공항공사 이제윤 부장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도청 및 도의원 등 20명이 참가했다.

한편 1,2차 비공개 토론회는 향후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양측이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 된다.

사전 준비 성격을 갖는 세 차례의 비공개 토론회가 모두 끝나면 개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도 긴급생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제안 수용하라”

더불어 민주당·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5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도당 원내대표, 오영희 미래통합당 도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21일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현재 1차 지급 결과 애초 예산보다 150억원이 남

았고 6000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금의 생활지원금이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뜻한다.”며, “도의회는 1차분 불용액과 제2차 생활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전 도민 지급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재난긴



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설계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재정 안정화기금 전액 사용 문제, 세출 조정 노력 있어야” 제1차 추경안, 조례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5월 15일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액으로 충당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홍명환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는 지방재 발행이나 미래에 나타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년도 말 적립액의 100% 범위에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모든 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임시회 상임위에서 세입이 불투명해지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 앞두고 단 1원이라도 세출 구조조정을 한 사항이 있느냐”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행사사업 등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생활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민간에 주기로 된 예산을 삭감해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도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관련 위기상황에 사용하도록 마련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모두 써 버린다면 앞으로 도래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세출 조정 등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을 점검해서 올해 집행하지 않거나 절감 가능한 재원을 하나 하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세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출범, 본격 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는 5월 1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 삼도2동)의 제안에 의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의원, 부공남 의원, 현길호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통과되어 6월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제주특별법 및 도의회 조례가 관련 입법의 연계성, 체계성, 효과성, 발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모임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향후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각종 특강 및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성과물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 조례안 등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제382회 제1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보고 2건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 관광객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했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 등 자구수정을 통해 수정가결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수정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면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가결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일자리 워킹그룹 2차 회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과 김경미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 2차 회의가 5월 12일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차 회의에는 도내 취약계층과 일자리 정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6명이 참여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남명진 지사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및 문부자 팀장(도 장애인복지과), 자활사업 정책 및 현황 관련 김경환 대표((사)일하는 사람들), 제주도 및 정부 일자리 정책 관련 김관현 팀장(도 일자리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워킹그룹 참여자들은 자유토론에서는 일자리 정책 행

정 조직의 혼재로 인한 통일적 추진 어려움, 취약계층 일자리 추진 지원 조직 필요, 복지와 고용에 대한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필요, 취약계층 당사자 조직간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협업, 제주지역에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추진 등 의견이 제출되었다.

일자리 워킹그룹은 향후 장애인 일자리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제도개선 및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제주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강화를 위하여 워킹그룹 회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명칭 통일 필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관련 현안 보고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를 마련해 환경수도 법적 정의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업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5월 18일 제 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보고받았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중앙 부처에 제출할 자료에서부터 동일사업에 대한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채 명시됐다.”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명칭을 제주세계환경중심도시로 통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사업 명칭이 제주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언어적 표현으로만 접근되서는 안된다.”며, “제주에 환경에 대한 규제가 높고 환경 기준이 높은 지역임을 세계에 선포하지 않는 한 ‘세계환경수도’, ‘세계중심도시’등의 명칭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부분에 대한 도민과 제주를 찾는 분들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상황이 반복되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현장 찾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382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15일 제주시 도남동 681번지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부지 현장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황 등을 청취했다.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는 약 21억 원의 총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는 우선 12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7월까지 상수도 및 전기시설, 주차장 및 산책로 등 일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청사 부지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받

표 이후 투자유치 공모, T/F팀 운영,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각종 행사 등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시에서는 항구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보강, 전기설비 증설, 주차장, 산책로, 어린이 유희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폐교 활용한 예술곳 산양 현황 조사 항만면세점 시설조성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제382회 임시회인 5월 15일 주민문화공간 조성사업(한림읍 작은 영화관과 예술곳 산양)과 국제

여객터미널 항만면세점 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했다.

첫 현장방문지인 한림읍 작은 영화관은 제주 최초의 공공 작은 영화관으로 총사업비 19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위탁운영기관으로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영화관 접근이 어려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40여개의 작은영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한경면 예술곳 산양은 지역 내 유희시설인 폐교 공간을 이용하여 예술가의 창작활동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창작실, 전시실, 커뮤니티실 등 7개동이 조성되었다. 위탁운영기관으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문화향유 증진 및 창작예술 증

진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개관을 예정하고 있어 관련시설의 개관에 맞추어 최종점검하고 관련 문화시설의 건립효과와 운영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항만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99억 원이 소요된 사업(지상2층, 연면적 6,450.41㎡)이나 2017년 준공이후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이다.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철수로 인한 경영재무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비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영업종료에 따른 현안보고에 앞서 시설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인화초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5월 22일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인화초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인화초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마련하기 위해 인화초 주변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화초 통학로 조성사업은 2018년과 2019년도에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 800여명이 인화초 통학로 조성과 관련하여 도 관계부서에 진정서를 넣을만큼 지역현안이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업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5월 14일 인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인화초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

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주민요청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박호형 의원은 “인화초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나 인화초 주변의 좁은 도로 여건과 주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 14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해 도의회, 도, 교육청, 지역주민 등 민관이 함께 모여 이번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께서도



통학로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정, 대정해상풍력발전 소극적으로 대처”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인 대처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의원)는 5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추진한 지 수년이 지났다.”며, “(대정해상풍력발전의) 사업자가 정해져 있으니 이제 제주도정이 할 게 없다면 정책 목표를 포기하

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좌초되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 아니냐. 사업자가 도정의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경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김성언 정무부지사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직전 정무부지사는 도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려 했다.”며, “그러나 정무부지사에 대해 ‘허수아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지어 정무부지사가 하는 일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등 현장방문

1차 산업 현장서 의정자문위원 현장 간담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제382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그리고 1차산업 선진농업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정을 펼쳤다.

현장방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통산진흥원 중점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했으며, 특히 관로, 자금지원, 수출지원 분야 등을 들여다봤다.

이어 제주테크노파크(JTP) 전기배터리 산업화센터에서는 수거하는 폐배터리의 입고부터 각종 검사, 등급 부여, 폐기 출고까지 모든 이력관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관리하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배터리 성능 평가 기준의 표준화 기반 마련사항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배터리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km² 해상에 200MW 규모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지난해 1개 마을 5.46km²·100MW 규모로 축소됐다.

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활용 시범사업’은 성능 평가를 마친 재사용 배터리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시제품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JTP는 기업의 배터리 활용능력과 안전관리 대책 등의 평가를 거쳐 2개사 내외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마지막 현장방문에서는 서귀포시 지역 1차 산업 현장을 찾아 의정자문위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주지역 1차 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도 제주교육의 희망”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촉구

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이상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시켜 논란을 빚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교육의원)는 5월 18일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기존 1조2061억원보다 265억원(2.2%) 많은 1조2326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만 7세 이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7만6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26억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급 시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당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또 범리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에 최근 도와 도교육청에는 교육기본권 침해, 교육복지 차별 등을 지적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의원들은 “도교육청 방침에 따르면 실제 유권자인 20~70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제주교



육희망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걸 문제가 안 되느냐.”고 꼬집으며, “도교육청은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본질적인 수업 효율성 고려한 원격수업 정착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강종룡·부공남·강성균 의원(사진·왼쪽부터)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의 질적인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육의 본질적인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비대면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5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대익 의원은 현재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간 편차를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가정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학습관

리를 위하여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기기와 학습지원 등은 물론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와 컨설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활한 원격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소개

민식이법 시행,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구체화 강성민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도2동 을·사진)은 5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용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개정안 제8조제7호)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개정안 제14조)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린이날을 앞둔 1일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비롯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구성을 신설해 통학로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심의하고, 통학로 내 횡단보도·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이전 시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보다 더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을 보탤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학교와 지역 향토사 알려줘야”

강성의 의원, 도교육청 지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 민주당, 화북동·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지역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찾고 지역 정체성을 함양함으로써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의 의원은 우리 제주에서 학교는 많은 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탄생된 사례가 많은데,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즉, 학생은 학생대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각자 바쁘게 갈 길을 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지역 역사 교육이 활성화되고 학교의 역사를 알아 가게 된다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서로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선학교에서 지역 역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함은 물론 지역 역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 더불어 일선학교에서 역사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 교육과정 운영 △ 역사관 운영 △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독립생활 영위

김경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이 대표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로의 복귀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교육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특히, 자립 단계에 가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 제공으로 자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제주 청소년쉼터 퇴소로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 정착금 5백만원이 지원되게 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경미 의원은 “누군가가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우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잠시나마 나의 모든 힘을 쏟을 때 가능하다. 그렇기에 그로 인한 영향은 무엇보다 크다. 일어선 그 사람은 앞으로 다시 걸을 수도, 혹은 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선물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원도심 및 산지천 일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근거 확충

문종태 의원, 제주도 탐라문화광장 문화진흥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 민주당,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탐라문화광장 활성화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이곳에서 진행 중인 여러 문화콘텐츠 및 예술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고 동시에 공공이 조성한 문화공간의 이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근거도 신설한다.

개정 조례 주요 지원 신설 조항으로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문화예술시장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탐라문화광장 관련 콘텐츠 제작, 문화광장 활성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 문화광장 일원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는 문종태 의원은 “원도심의 중심적 공간인 탐라문화광장이 다시 시민과 함

께 호흡하며, 원도심의 핵심공간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올해 탐라문화광장에서는 문화 콘서트를 비롯하여, 아트페어, 문화예술시장, 문화상품 전시, 시민참여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사업진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에는 문종태의원 외에 홍명환, 현길호, 김장영, 김황국, 강성의, 고현수, 양병우, 김경미, 박호형, 송영훈 의원 등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제382회 임시회에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위한 제도 마련 오영희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사진)이 대표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급격한 사회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한부모가족 대상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구의 가구유형이 소규모화 및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민감성 높은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현대사회의 급작스런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부모가족 유형이 다양화 및 증가하고 있다. 적지 않은 한부모가족이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증고를 겪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족해체와 가족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어떤 대상보다 사회적지지 및 제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생생 의정활동

한경면 119센터 방문, 소방공무원 등 격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5월 6일 한경면 119센터를 방문하여 소방공

무원 및 의용소방대를 만나 격려 및 간담회를 가졌다.

오영희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가 지난 4일 양돈장 화재와 5일에는 화재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제주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화재 및 응급 구조·구급 활동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한경면은 고령 인구가 많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 크다. 또한 관내 축사 및 풍력발전기

화재대비 에도 안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오 의원은 센터 시설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 등이 생활하는 곳인 만큼 공간적으로 부족하거나 노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고,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3월에는 향만119센터 추자지역대를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격려하기도 했다.

놀이와 여가활동 참여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 보장 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5월 21일 가결됐다. 이는 도내 아동들이 실제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가 함께하고,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놀이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2019년 9월 발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시민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① 가정 및 지역사회 놀이: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대중 인식개선, 획일적인 놀이터 개선 및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지역 내 놀이기회·활동가 및 안전지킴이 배치, 관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

② 학교 내 놀이: 학교교육과정 내 중간놀이시간 확보 및 운영지침 필요, 교내 전반에 놀이공간 확대 및 활용성 제고, 학교 내 놀이활동가 투입 및 교사 놀이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의견

이를 토대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요하게 조례안에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본 조례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 후에도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함께 해당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현장의 의견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본 조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이성경 팀장님이 시민위원회 간사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이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주최 오영희 의원실(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 주관으로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간담회』가 5월 11일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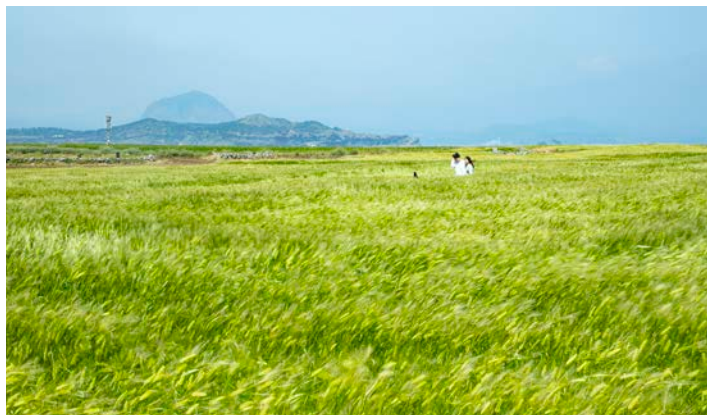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간담회에는 도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관계자, 한부모 가족 당사자,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오영희 의원은 “한부모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으로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제안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강화 필요성’,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 체계를 위한 센터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로 읽는 제주



제주

손택수

섬에 와서 잘 이해되지 않는 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거리가
서울과 부산의 거리만큼 멀다는 것이다

일산에서 동탄까지 왕복 4시간 가차이 출퇴근하는 나로서는 가우뚱한 일,

더 작은 단위로만 이동하면서
섬은 자신의 공간을 드넓게 하는지도 모른다

여기엔 어떤 무구가 있다
순도 높은 고독과 집중이 있다

마을 하나가 천지였던 어린 날처럼 함부로 경계를 넘지 않고 가능한
머무는 땅을 온전히 몸으로 겪고자 하는, 아끼고자 하는,

섬은 그러니까 바위 하나에도 노래와 이야기를 남긴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12일	정례회 2회/41일, 임시회 8회/71일
3월	제380회 임시회	3.17.(화) ~3.24.(화) (8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감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81회 임시회	4.16.(목) ~4.29.(수) (10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82회 임시회	5.14.(목) ~5.21.(목) (8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6.15.(월) ~6.25.(목) (11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84회 임시회	7. 1.(수) ~7. 3.(금) (3일)	· 하반기 원구성
	제385회 임시회	7. 13(월) ~7. 23.(목) (11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월			
9월	제386회 임시회	9.16.(수) ~9.22.(화) (7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87회 임시회	10.13.(화) ~10.29.(목) (17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388회 제2차 정례회	11.16.(월) ~12.15.(화) (30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89회 임시회	12.17.(목) ~12.23.(수) (7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회적 거리 두기이다. 전염병으로 인해 새롭게 떠오른 말이긴 하지만 거리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유행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핫 플레이스로 불리는 곳이다. 카페거리, 벽화거리, 한옥거리, 벚꽃거리, 가로수길, 경리단길, 황리단길 등 사람들은 거리 혹은 길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곳으로 왁자지껄 몰려다닌다. 이럴 때 '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비교적 큰길들이 이어져서 오가는 사람들이나 차량들이 많은 곳이고, 두 번째 의미는 특정한 문화나 의미를 상품화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두 번째에 가까운 의미로 그곳을 찾아간다. 오히려 이곳 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로 엮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공간에서의 거리가 중요해진 시기다. 감염의 근원지이기 때문이다. 거리가 텅 비었다는 말은 사람들의 인기척을 찾기 힘들다는 말이다. 거리와 사람들의 관계는 이토록 때때로 뜰 수 없는 관계인지 모른다. 코로나 이야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거리는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인식의 대상이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제주는 어쩌면 그 둘 다를 포함하며, 또 다른 의미로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에 관광을 왔다가 잠깐 다니러 온 경우 만일 손님이 서귀포에 있는 숙소에서 머무른다고 했을 때, 제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난색을 표한다. 물리적으로야 한 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거기까지 가야겠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시인이 '서울과 부산의 거리만큼 멀다'고 한 말은 농담이 아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걸 뜻한다. 다른 지방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다 보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거기에는 한라산이라는 거대 신이 있다. '마을 하나가 천지였던 어린 날처럼 함부로 경계를 넘지 않고 가능한'에서 신성한 한라산은 마음의 경계이기도 했다. 함부로 넘을 수 없는 한라산은 시집을 가거나 상(喪)을 당했을 때도 예를 갖추어 넘어갔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서귀포로 가는 거리는 산(한라산) 하나를 넘어가는 일이다. 굳이 일만 팔천 신을 거느리지 않아도 자연과 토속적인 신앙을 중요시하는 제주사람들만의 의식이다. 얼마나 신성한 일인가. 그래서 시인은 '여기엔 어떤 무구가 있다/순도 높은 고독과 집중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여기서 거리는 단순하게 물리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로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역사와 문화와 생활이 녹아 대대로 흐르는 땀줄 같은 거리 말이다. '머무는 땅을 온전히 몸으로 겪고자 하는, 아끼고자 하는,' 그래서 '바위 하나에도 노래와 이야기를 남긴다'는 문장은 온전히 섬을 섬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다. 섬은 오롯이 섬을 맞이해야 한다.

글 김효선/시인

청탁금지법 Q&A

Q	<p>시·구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내가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번만 못 본 척 하고 위반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단속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p>
A	<p>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p> <p>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반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제6조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의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코로나19 사태의 모범적인 방역 대응과 의료진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황이 호전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실천하는 생활방역 체계를 말한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멸되지 않는 한 재유행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만큼 개인방역 수칙을 잘 알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다음

과 같다. 제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감염될 수 있으니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여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제2수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둔다. 코로나19는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는 경우 대화, 기침 등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제3수칙은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린다.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지켜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4수칙은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마지막으로 제5수칙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한다.

코로나19는 혼자서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개인방역 수칙은 개인 위생관리와 기본적인 거리두기가 필수이며, 일상생활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것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온 사회적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준수하자.

강성택 주무관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바이러스 대유행은 지구환경 파괴의 부메랑



이전의 삶으로 돌아 갈 수 없는 결정적인 변화의 날씨가 만나 여러 사람들은 갈등을 겪고 생태환경의 선택을 통해 예전과는 아주 다른 변화를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들이 다시 제자리 오더라도 이전 같은 환경이 아닌

코로나19 기상 이상의 거대한 사건을 겪은 인류는 분명 아주 옛날과는 다른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바이러스 진원을 밝히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 기라는 인류 사상 최대의 사건의 이미 눈앞에 와 있음을 직시하고 있으며 작금의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기상날씨의 사건 앞에 서성거리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성격의 자연재해가 등장하는 가 하면 기상이변은 뉴노멀(New Normal : 기상이 변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 전례 없던 자유와 물질적 풍요의 인간시대에 살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자원의 소비로 지구환경은 악화 시켜나가는

지구생태 활동 총량의 날 너무 가까운 시대에 인류의 종의 다변화 되고 전례 없는 기후 변화를 마주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접어든 우리는 5대양 6대륙 민족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기 쉬운 지구환경의 악화됨을 경고한 이들의 세세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 유행은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의 경고가 지구환경 파괴의 부메랑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얼마나 더 많은 바이러스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을지, 얼마나 더 많은 기상자연 현상을 목격할지 과거의 현상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다.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경험하지 못한 행동양식을 양산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주는 의미는 인간적 행동의 규제이거나 인간미의 상실로 심각한 트라우마형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구성원들은 모바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화상회의는 물론 선택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의한

집단 바이러스 감염차단 등 디지털 혁신 경영의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 모범적이고 통제가 잘된 민적으로 각인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뉴노멀 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한 빅데이터, 인공 감지센서 기능, 인공지능의 활용, 자율/자동주행을 포함한 온라인에 의한 시장의 다변화는 스마트한 플랫폼 시장이 새롭게 전개 될 것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기술은 훨씬 빠른 속도로 생활전반에 깊숙이 원활하게, 유연한 형태의 초고속 이동통신망 구축과 함께 정보 데이터 보안기술은 복잡하고 다양한 인적 물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삶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산업혁명 핵심기술 구축과 활용은 한반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는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박정환 박사 / 뉴드림 월드

도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p>토론회</p> <p>제주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전문위원실별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의 활발한 토론회가 열립니다.</p>
<p>인터넷방송</p> <p>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폐회식, 상임위원회별 회의상황,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생중계 및 녹화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p>	
	<p>회의록 열람</p> <p>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교육행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회의록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p>
<p>드림제주21 등 소식지 발간</p> <p>제주의 주요 이슈를 담은 계간 '드림제주21'과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월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와 계간지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p> <p>※ 문의 :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 064-741-2285</p>	
	<p>의정자료센터</p> <p>의정자료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전 행정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책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 열람 및 대출, 정책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p> <p>※ 문의 :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064-741-2305</p>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안과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입법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오니,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5. 1 (수) - 7. 31 (수)

공모분야	4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 및 도정 발전 방안 ○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심사발표	2020. 8. 31. (월)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통보						
대상	누구나	시상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및 상금						
응모방법	전자우편 및 정기우편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무료) - 전자우편: jheeri19@comail.kr - 정기우편: 우송3119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공모담당자 - 문의전화: TEL. (064)281-2273 / FAX (064)281-228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최우수상(2명)</td> <td>우수상(2명)</td> <td>장려상(4명)</td> </tr> <tr> <td>200만원</td> <td>각 100만원</td> <td>각 50만원</td> </tr> </table> ※ 시상규약은 홈페이지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우수상(2명)	우수상(2명)	장려상(4명)	2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최우수상(2명)	우수상(2명)	장려상(4명)							
2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작성요령	공모 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아이디어 내용 (작성방안 및 대책),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실(064-741-2273)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 1부 ※ 신청서 서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입법담당> 고시/공고) 다운로드 ※ 전자우편 제출 시 용도자 서명 또는 날인된 공모 신청서 스캔파일 제출	심사기준	5개 항목 100점 만점(항목별 각 20점) ○ 실현가능성 ○ 창의성 ○ 효율성 ○ 전문성 ○ 계속성						

전국 최초 '청렴서약제' 시행 청렴한 자치입법 활동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5월 20일부터 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고 청렴·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시행한다.

현재 도의원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입법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회신을 받고 있다.

이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뢰서와 검토결과 회신서에 도의원과 이를 검토한 담당공무원이 청렴서약을 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발령하면서 바로 시행하게 된다.

청렴서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도입·운영 중인 제도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이를 자치입법 활동에 도입했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12일 인사청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6월 1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내정자(김정학 前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명동의안은 지난 5월 29일 의회로 접수,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 후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은 "1995년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

사는 2018년 기준 매출액 2,747억원의 도내 최대 공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노사문제로 인해 사장이 사임하면서 5개월간 공석이었던 개발공사 사장이 내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노사문제, 적자 사업, 시설 및 근로자의 안전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운영 효율화, 조직관리, 노사화합, 근로자 안전문제 등의 해결 능력과 업무 수행능력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카드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깨끗한 세상을 약속합니다

부정청탁 No! 뇌물수수 No!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렴 1등급 달성을 향해 신발끈을 다시 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청렴'과 관련해서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바로 '청렴 1등급' 달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를 '청렴 1등급' 달성의 해로 정하고 의원과 직원 모두 공사 생활에 청렴을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력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뛰겠습니다.

-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자체 청렴도 평가 체계 마련
-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 및 부서 책임성 강화
- 청렴의 생활화를 위한 부서별 자체 청렴도 추진 기반 마련
- 사무처 직원 및 도의원과 청렴시책 공유 및 추진상황 평가·환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패우발요인 사전 제거 및 개선
부패 요인을 찾아 꼼꼼히 진단하고 해소하겠습니다.

- 청렴 컨트론타워 구성·운영
- 행동강령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 점검·신고접수·조사처리 등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감사계획 및 결과 적극 공개
-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문화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
청백리를 명예와 긍지와 자부심으로 삼겠습니다.

- 직원 및 의원 청렴 관련 전문가 교육
- 1부서 1청렴시책 발굴·공유
- 공직자 노동조합(도의회지부)과의 청렴협약 체결
-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
- 공무원외여행 보고서 등재 점검
- 주기적 사랑 나눔 봉사활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렴은 국민과의 본질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다시 펴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렴 1등급' 달성을 향한 도전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해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겨낼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